

전북도·도교육청·농진청 등 9개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정착에 '합심'

자재감사기구 협의회 개최
전문성·독립성 논의도
올 추진 청렴누리문화제 등
공동 협력사업 긴밀 협조

전라북도를 비롯해 도내 9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책임자들이 청렴 문화의 확산과 정착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전북도는 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들이 한데 모여 제2회 전라북도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16일 발족했으며 현재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인프라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전북지역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북도의 가치 있는 청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청렴전북을 위해 추진하는 전라북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청렴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 자체감사기구 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9개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책임자들이 청렴 문화의 확산과 정착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 발전방향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독립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9개 공공기관 감사기구의 장은 전북지역 청렴정책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두렵고 단단한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올해 추진될 청렴누리문화제 등 공동 협력 사업에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전북연구원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내년 출범하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과 추진경과, 특례 및 대응방향, 감사위원회 개편 주요 내용 등도 공유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개최되는 전 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와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 1

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청렴과 상식에 뿌리를 둔 특별한 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일상 속 청렴 문화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민 모두에게 확산되고 정착돼 부패없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지지자만으로 선거 못이겨”

민주 박광은 원내대표 “확장·통합해 총선 승리할 것
총선은 확장성 싸움… 경제 정책서 신뢰 받는 당 될 것”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지지자만으로 선거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장하고 통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다”며 “올해 민주당의 목표와 방향은 확장적 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노동절인 어제 국민께 말씀드린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5일제 추진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다.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나오고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며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다.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표는 이해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통합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다루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겠다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지 안건을 제안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돈봉투 사건은 쇠신 의총 하루의 주제다. 그 외 쇠신, 변화와 관한 모든 주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시대 역행하는 정권에 민생 맡길 수 없어… 정책정당 자리매김에 힘 보태 것”

민주 윤준병 의원, 당 원내부대표 선임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신임 원내부대표에 윤준병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원내부대표는 다음 총선 때까지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

기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여야간 정책조율의 일선에서 원내부대표의 역할을 맡게 됐다.

윤 부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이후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수렁에 빠져 우리 국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민



윤준병 의원

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일본과 미국 퍼주기 예산이 돼 있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권에 민생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부대표는 “지금 국민이 믿을 정당은 민주당 뿐”이라며 “앞으로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써 민주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 정부 태도 전환을”

민주 박광은 원내대표 “전세 사기 지원책, 가장 쉽게 합의 가능”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한다.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 피해자들을 또 한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며 “전세사기는 결코 피해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윤창호법, 김용균법, 민식이법, 정인아법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피해자의 이름이 붙여진 법이 만들어질 과정은 참으로 슬펐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제 다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1분이 피해자들에게는 하루라도 같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사회적 재난 앞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전세사기 지원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정치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당은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뉴시스

Ground Seohak
Exhibition & Art Fair

서학아트스페이스 2023. 3. 23 ~ 5. 10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7
아트갤러리 전주 2023. 3. 23 ~ 4. 15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 (전주아트센터)

민주·정의 원내대표 공동 정책 처리 '공감대'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 등 공동 정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정당 간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당 간 정례적으로 정책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선 이후 예방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의당과 공감대 있었다고 하고 박 원내대표도 좋은 의견이라고 했다”며 “향후 정책협의를 위해 3당이 협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가 1년여 남았는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민생 법안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일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해 함께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많이 나눴다”고 보냈다.

류효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공통 제안한 정책협의체를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해 공통적인 정책을 먼저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정책협의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을 묻자 “긍정적으로 답했다. 전세사기 건이러든가 당면 현안을 잘 처리해 나가겠다”며 “당시에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치개혁이나 노동 존중 관련 민생 법안 중심으로 얘기 나눴다”고 전했다.

실제 양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 존중 민생 법안 정치개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뉴시스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 주관 정책토론회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은 2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출범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약칭 전국원전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이며,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성민 국회의원 이 주최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가 주관하여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

명은 508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안전이 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정책연대 협약을 진행했으며, 이어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재욱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박종은 동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 빈도와 방사는 전과’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패널)로는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지역연구소장이 ‘국가 방사능 방재 체계,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은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 이현정 행정안전부 방재정책과장은 ‘지방교부세법,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를 주제로 다양한 시각과 분야를 발표해 청중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 성황리에 토론회가 마무리 됐다. /부안=김석진 기자